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83호 1판 (음력 7월 22일)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문화도시 광주, 부끄러운 도시경관

5년마다 수억씩 들여 경관계획 수립…사실상 무용지물
보존·유지 보다 정비·개발 집중…경관 갈수록 피폐해져
대상 신규 개발사업·신축 건축물로 늘려 심의 강화해야

아파트로 뒤덮인 문화도시 광주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용지물'인 경관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관계획이 마련되고, 이 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으나 도심 및 외곽의 경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공공자산인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보존·유지보다는 정비·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030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주)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게 예산 3억 6645만원에 맡겨 지난 8월 24일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경관계획은 광주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관기본계획은 ▲경관현황조사 및 자연, 농촌, 시가지, 기반시설 유형별 분석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중점관리구역, 경관관리 등 기본계획 ▲야간조명, 지역별, 색채, 광고물 등 경관 유도를 위한 각종 설계 지침 ▲경관발전 및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만㎡ 이상 면적에 대한 개발사업,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 경관지구 내 3~5층 규모 건축물 등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문제는 경관기본계획이 광주 경관의 유지·보존이나 개선 등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 '2020 도시경관기본계획', 2011년 '2025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이어 2017년 2030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지만 광주의 경관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자산인 경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마지막 절차로 개발사업이나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 등이 경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고 계획 일부를 첨삭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치구에서는 경관을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 없고, 광주시 역시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등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수립된 2025 광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고시하지 못해 이들 구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경관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광주시는 유독 경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도시 광주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서는 경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경관계획 수립부터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사업 기획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모든 신규 개발사업 및 신축 건축물로 확대시키는 한편 절차에서도 가장 먼저 경관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지난 2005년 경관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광주 어디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웠으나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며 "경관 고려 없는 도시개발 없다는 대원칙 하에 광주 경관에 전반에 대해 되돌아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1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건리 위원장 등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5·18특조위 출범…위원 9명 모두 민간인

조사지원단 30명중 17명 군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건리 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관에 마련된 특조위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특조위원은 광주시 추천 3명을 포함, 9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 활동을 뒷받침할 30명 규모의 '실무조사지원단'이 설치됐다. 이들은 군인 17명, 공무원 2명, 광주시 추천 민간조사관 4명, 검찰·경찰·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6명 등이다. 지원단에는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을 둬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조사지원단장은 현역 공군 소장, 3개 팀장은 육·공군 대령이 맡는다. 헬기 사격 조사팀과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은 각각 육군과 공군의 실무조사지원팀과 공조하며 특조위 활동을 지원한다.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자료 분석, 증언 청취, 현장 방문 조사 등에 나선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헬기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등 2개 의혹을 우선 조사하면서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예술감독 없애고 다수 큐레이터 기획
역사적 공공 장소 발굴·전시장 활용
광주비엔날레 기본 구상안…주제어는 '상상된 경계들'

광주비엔날레

2018 광주비엔날레는 기존 단일 예술감독 체제를 없애고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가 총괄 큐레이터를 겸임하는 다수 큐레이터제를 도입한다. 또 광주의 역사성과 공간성에 주목해 역사적인 공공 장소를 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1일 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회 광주비엔날레(2018년 9월 7일~ 11월 11일)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내년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큐레이터제의 도입이다. 1인 예술감독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광주 곳곳에서 여러명의 큐레이터가 동시다발로 전시를 기획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김선정 대표이사의 총괄큐레이터 겸임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시 공간은 당초 발표됐던 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을 활용하며 지금까지 20년 넘게 행사가 진행됐던 비엔날레 전시관도 그대로 사용한다. 특히 세계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함축된 광주의 역사적인 공공장소를 발굴, 전시 공간을 확장한다.

재단은 또 2차례의 예술소위원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주제어로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지난 7일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주제어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민족주의에 대한 저서 '상상의 공동체'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세계화 이후 민족적·지정학적 경계가 재편되고 있는 동시대 현상을 다룬다.

재단은 주제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조만간 공식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정상화 된 정국 다시 경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관련기사 4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번 부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의당에서 막판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자마자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 무산 사태가 발생,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은 물론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은 물론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국민의당을 비롯, 보수 야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